

Today's News Clip

오늘의 주요기사

2023년 10월 31일 화요일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목 차

江原日報	02면	동계청소년올림픽 성화 강원도 입성	1
江原日報	03면	주차환경 개선사업 안착 약속	2
강원도민일보	온라인	춘천 후평초 지하주차장 건립 추진...박기영 도의원 "주민 ...	3
CBS	온라인	박기영 강원도의원 "춘천 주차환경개선사업 안착 노력"	4
강원도민일보	02면	강원 살림살이 고삐 ... 도의회 예결특위 예산안 심사 준비	5
江原日報	03면	"역대 최대 세수 결손 대응" 머리 맞댔다	6
KBS 춘천	온라인	강원도의회 예결위, 내년 예산안 사전설명회	6
KBS 춘천		[여기는 강릉] 연안방재연구센터 '행정대참사'...대책도 논...	7
江原日報	15면	평창군 농업인의 날 행사	8
강원도민일보	13면	평창군 농업인의 날 행사	8
강원도민일보	10면	병산·남향진동 '주민주도형 요양원' 건립 상생발전 모델 제...	8
강원도민일보	10면	은빛갈대밭 향호 호수 건강걷기대회	8
江原日報	16면	화천읍 윗대이리 경로당 준공식	9
강원도민일보	13면	정선 전역 40분 내 농기계 임대 시스템 구축	9
江原日報	15면	정선군 전역 40분대 농기계 쿼서비스	10
江原日報	11면	10년 숙원 원주교육청 이전·신축 속도	10
江原日報	온라인	원주교육지원청 도전 10여 년만에 이전·신축	11
강원도민일보	03면	강원 총선 필승키워드 국힘 "정책" 민주 "소통"	12
江原日報	온라인	[포토뉴스] 제8회 영귀미면 체육회장기 게이트볼대회 개최	13
江原日報	온라인	[포토뉴스] 강원청년경제인연합회 제1회 골프대회 개최	13
江原日報	온라인	[포토뉴스] 제30회 두촌면민 한마음대회 및 제27회 노인의 ...	14
江原日報	온라인	[동정] 원제용.엄기호 강원자치도의원	14
江原日報	04면	신경호표 학력 향상 정책 수능서 통할까	15
강원도민일보	02면	내년부터 이·통장 수당 '월 30만원→40만원' 처우개선	15
강원도민일보	03면	동해·속초·삼척·홍천 부단체장 3급 상향 공직사회 '촉각'	16
江原日報	05면	농촌에 '빈집' 4천채 육박 ... 5년새 48% 급증	16
江原日報	06면	2년 뒤 강원산 양식 연어 식탁에 오른다	17

강원도민일보	04면	고성 이어 철원서도 발생... 도내 5번째 렘피스킨병 확진	18
강원도민일보	08면	춘천시의회 '댐 주민피해 공론화' 협의체 동참	18
江原日報	01면	"홍천~용문 철도, 수도권 접근 다변화·균형발전 기여"	19
江原日報	02면	강원자치도 '동해안 철도시대' 비전 선포	19
강원도민일보	03면	부단체장 직급 상향·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인상 추진	20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자치조직권 확대, 분권 강화 계기	20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자치조직권 확대, 분권 강화 계기	21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구미정 원림' 국가명승 가능성 있어	22
江原日報	19면	[사설] 최선의 지역소멸 위기 대응책은 '미래산업 육성'	23
江原日報	19면	[사설] 시·군 '연대-협력' 강화해야 지역 현안 해결된다	24

江原日報

2023 10 31 ()

02

동계청소년올림픽 성화 강원도 입성

속보=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의 성화가 11월6일 강원특별자치도에 입성한다.

지난 3일 그리스 아테네에서 채화된 동계청소년올림픽의 불꽃이 한 달 간 서울, 부산, 세종, 제주, 광주를 돌아 개최지인 강원자치도에 도착(본보 10월12일자 1면 등 보도)하며 본격적인 불업을 견인하게 된다.

강원자치도와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조직위원회 등은 이날 오후 3시 도청 분수공원에서 성화 입성 환영식을 개최한다. 김진태 강원자치도 지사와 권혁열 도의장, 신경호 도교육감 등은 성화봉에 접화하면서 성화의 강원자치도 입성을 환영하고 2024동계청소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응원한다.

이날 환영행사 이후 7일 오후 1시 30분 속초 설악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강원지역 투어를 시작한다. 기존 올림픽의 주자에서 주자로 이어지는 봉송 릴레이가 아닌 18개 시·군 별로 학교를 찾아가 청소년들과 함께 접화식과 올림픽 가치 교육프로그램을 선보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군 성화투어는 12월28일 강릉중에서 막을 내린다. 내년 1월 중에는 소외계층을 찾아 성화를 체험

11월6일 춘천 도착... 도청 분수공원에서 입성 환영식

내달 7일 속초 설악고 시작 18개 시·군투어 진행

하는 특별투어도 열린다

아시아에서 처음 열리는 동계청소년올림픽인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의 시설과 유산을 활용한

다. 내년 1월19일 개막해 2월1일까지 평창과 강릉, 정선, 횡성에서 펼쳐진다.

81개국 1,900명의 청소년 선수들이 참여하며, 스포츠를 통한 공존과

화합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진태 강원자치도지사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처음 치르는 국제 스포츠 대회인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대회 준비에 만전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기영기자 answer07@kwnews.co.kr

江原日報

2023 10 31 ()

03

주차환경 개선사업 안착 약속

박기영 도의회 안전위원장

박기영(국민의힘·춘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장이 춘천 후평동 주차환경 개선사업 등 강원특별자치도 주차환경 개선사업의 성공 안착을 약속했다.

박 위원장은 30일 후평초교에서 열린 춘천시 주차환경 개선사업 간담회에서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철저히 수렴 반영해 도의회 차원에서라도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현정기자

2023 10 30 ()

강원도민일보

춘천 후평초 지하주차장 건립 추진...박기영 도의원 "주민 활용, 안전 문제 풀겠다"



▲ 박기영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장

강원도 주차환경개선사업 중 하나로 춘천 후평초등학교에 지하주차장이 건립된다.

박기영(춘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장은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강원도내 최초로 학교 운동장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는 사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주차장은 지하3층·200면 규모로 총사업비 150억(도비 97억5000만원, 시비 52억5000억)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날 후평초에서 열린 춘천시 주차환경개선사업 간담회에서는 △인근 주민 주차장 활용 △공사기간 안전 대책 등이 언급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박기영 안전건설위원장은 "골목 안에 학교가 있어서 아이들 안전 확보도 어렵고, 주민들도 주차난을 겪는 곳"이라며 "주민 활용 문제, 안전 문제 등을 기관과 협의해 잘 풀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 주차환경개선사업은 각 시·군의 도심주거지 등 주차난 심각지역에 공영주차장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내년도 주차환경개선사업은 춘천 후평초 등 8개 시·군 10개 사업이 선정됐다.

이설화

2023 10 30 ()

CBS

박기영 강원도의회 "춘천 주차환경개선사업 안착 노력"

강원CBS 박정민 기자
핵심요약

강원도 주차환경개선사업, 춘천 후평동 등 8개 시군 10개 사업 선정
강원도 최초, 춘천 후평초 운동장에 지하주차장 건설
박기영 의원 "주차난 해소 위해 원활한 사업 추진 예산확보 노력"



박기영 강원도의회 안전건설위원장. 강원도의회 제9기 강원도의회 안전건설위원장 박기영 의원(국민의힘·춘천3)이 강원도 주차환경개선사업에 포함된 춘천 후평동 주차환경개선사업의 안착을 약속했다.

박 의원은 30일 춘천 후평초에서 열린 춘천시 주차환경개선사업 간담회에 참석해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춘천시민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철저히 수렴해 반영하고 도의회 차원에서도 차질없이 사업추진이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춘천 후평동 주차환경개선사업은 강원도 최초로 후평초 운동장에 지하3층, 200면 규모로 총사업비 15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다.

강원도 주차환경개선사업은 각 시군 도심주거지 등 주차난 심각지역에 공영주차장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 주차환경개선사업은 8개 시군 10개 사업이 선정돼 추진 예정이다.

박 의원은 "이번 주차환경개선사업 선정이 조속한 공사 추진으로 이어져 심각한 주차난으로 일상의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고충이 하루 빨리 해소되기를 기대한다. 강원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주민들의 의견 반영 및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확보 및 관계 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강원CBS 박정민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무철)는 30일 춘천 KT&G상상마당에서 2024년도 예산안 비공개 사전설명회를 열었다. 서영

강원 살림살이 고삐... 도의회 예결특위 예산안 심사 준비

내년도 예산안 비공개 사전설명회 세수결손 예상 긴축재정 본격화

강원특별자치도가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예고, 긴축 재정 작업이 본격화된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 준비에 돌입했다.

도의회 예산결산특위(위원장 이무철)는 30일 춘천 KT&G상상마당에서 2024년도 예산안 비공개 사전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엔 김만호도 예산과장, 전봉주도 교육청 행정국장 등 이각 기관의 내년도 예산 기조에 대해 설명하고, 예결위원들과 질의·응답을 가졌다. 이무철 도의회 예결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예산은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도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해서 어려운 가운데 대안을 찾는 뜻깊은 자리였다면 한다”고 밝혔다.

도는 이날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의 세수 평가가 발생함에 따라 내년도 지방정부 재정에 큰 타격이 불가피한 점을 설명했다.

앞서 도는 경기침체 장기화와 부동산 거래 급감에 따른 지방교부세 및 지방세 감소 등으로 올해 기정예산 대비 4700억원 이상의 세수결손이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도는 세출 구조조정 및 집행시기 조정, 세외수입(도비보조금 반환금 등) 확충을 통해 3100억원 규모의 재원을 절감하고 나머지

부족재원 1600억원은 내부기금을 활용해 조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열린 예산안 사전설명회에서도 이같은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와 관련, 도는 보조금 사업의 경우 미흡 및 부족 등의 평가를 받은 사업들은 사실상 폐기가 불가피하다는 점 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도의원은 “세수가 급격하게 줄어든 만큼 최대한 규모있게 예산을 짜면서 신규 사업은 꼭 필요한 것만 편성했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여러모로, 예산 상황이 녹록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도도 예산안 본심사는 오는 12월 4~7일까지 4일간, 도교육청 예산안 본심사는 오는 12월 11~13일까지 3일간 열린다. 이철화

江原日報

2023 10 31 ()

03

“역대 최대 세수 결손 대응” 머리 맞댔다

자치도의회 예결특위 예산안 사전설명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역대 최대 규모 세수 결손에 대응하기 위해 집행부와 머리를 맞댔다.

도의회 예결특위는 30일 KT&G 상상마당 춘천 나비홀에서 2024년 예산안 사전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예결특위 위원들은 김만호 강원자치도 예산과장, 전봉주 도교육청 행정국장으로부터 각각 내년도 재정 여건, 예

산 편성 방향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또 내년 주요 정책과 사업에 대해 질의하며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도의회는 오는 12월4일부터 7일간 2024년도 예산안 종합심사에 나선다.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아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설명회에서는 내년도 지방세, 지방교부세 등 세수 감소로 긴축 재정 기조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논의됐다. 의원들은 도민

들에게 갑작스러운 충격이 가지 않도록 집행부와 대안을 고민했다. 특히 재정 건전성 유지와 민생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 고민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무철 예결특위 위원장은 “올해와 내년 강원자치도 세수 결손이 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모든 도민에게 재정이 고르게 분배될 수 있는 예산 편성을 고민해 도민의 삶에 도움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현정기자



2023 10 30 ()

강원도의회 예결위, 내년 예산안 사전설명회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늘(30일) 춘천 KT&G 상상마당에서 내년도 예산안 사전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강원도의회 예결위원들은 설명회에 참석한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 관계자 등에게 내년 예산안 편성 방향과 주요 사업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세수 결손과 정부의 긴축 기조에 따라 두 기관에 다양한 긴축안을 제시했습니다.

박성은

[여기는 강릉] 연안방재연구센터 '행정대참사'..대책도 논란

앵커

이어서 강릉입니다.

정부가 강릉에 추진하려 한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가 부지 무상 제공 문제로 여전히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와 협약 과정에 부지 무상 제공이 가능한지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백억 원짜리 국비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놓이면서, '행정 대참사'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면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해안 침식 전반을 연구할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예정 부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옥계지구입니다.

2021년 강원도는 해양수산부와 협약을 맺고, 옥계지구 6만 8천여 제곱미터를 무상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관계 법령에 따라 부지 무상 제공이 어렵다는 점이 뒤늦게 확인됐고, 이후 사업 추진은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행정 착오로 10년 가까이 추진해 온 450억 원짜리 대형 국비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 겁니다.

특히 이번 사태의 핵심인 부지 무상 제공을 놓고, 사전 법률 검토나 심의 등도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호균/강원도의회 의원 : "주민들의 생명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도 연안항만방재센터는 반드시 설립이 되어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진행되지 않고 답보 상태로 있다는 것은 행정의 무능이고 행정의 대참사다..."]

사후 대책도 논란입니다.

강원특별법에 특례 조항 신설이나 해수부 매입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투명합니다.

[정호철/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북평옥계사업부장 : "현재 (강원도) 해양수산국하고 저희하고 노력해서 해수부를 설득하고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끝까지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가 우리 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은 사업이 무산될 경우 해당 부지에 유망 기업을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구센터 설립 무산 우려 속에, 부지 무상 제공 방안을 애초에 어디서 먼저 제시했는지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감사위원회 감사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정면구입니다.

촬영기자:김중용

江原日報

2023 10 31 ()
15



평창군 농업인의 날 행사 2023년 평창군 농업인의 날 행사가 30일 대화면 더위사냥축제장에서 심재국 군수, 지광천·최종수 도의원, 농업인 등 1,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강원도민일보

2023 10 31 ()
13



평창군 농업인의 날 행사 평창군 농업인의 날 행사가 30일 대화면 평창더위사냥축제장에서 심재국 군수, 김성기 부의장과 군의원, 지광천·최종수 도의원, 최창순 NH농협 군지부장, 전영록 군농어업회의소 회장, 농업인 등 1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강원도민일보

2023 10 31 ()
10

병산·남향진동 '주민주도형 요양원' 건립 상생발전 모델 제시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투입

강릉시 병산동과 남향진동 주민들이 마을에 배당된 안인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특별지원금으로 주민주도형 '요양원'을 건립해 상생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시 병산동과 남향진동 주민들은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금 33억원과 자부담 37억원 등 총 70억원을 들여 성덕로 138번길 일대 부지 4406㎡에 요양원을 건립했다.

30일 요양원 현지에서는 최종백 시경제환경국장, 최승순·김용래 도의원, 배용주·김홍수·홍정완·최익순·김용남 시의원을 비롯한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식을 갖고 자축했다. 이번에 건립된 요양원은 1인실 6개, 2인실 19개, 4인실 9개 등 총 80명이 수용되는 규모로 조성됐다.

앞서 주민들은 병산남향진복지단을 설립하고 요양원의 명칭을 '어머니 품애(愛)'로 정하는 등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요양원 건립에 적극 나섰다. 주민들은 요양원에 입주하는 어르신들의 심리적 안정 등을 위해 요양원의 위치를 바다가 조망되고 소나무 숲이 우거진 최고의 경관지에 조성했다. **홍성배 sbhong@kado.net**

강원도민일보

2023 10 31 ()
10



은빛갈대밭 향호 호수 건강걷기대회 강릉시 주문진읍 건강위원회(위원장 최상정)가 주관한 제8회 은빛갈대밭향호 호수 건강걷기대회가 최근 김용래 도의원, 조대영·허병관 시의원을 비롯한 사회단체장,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江原日報

2023 10 31 ()

16



화천읍 윗대이리 경로당 준공식 화천읍 윗대이리 경로당 준공식이 30일 화천읍 윗대이리 마을에서 최문순 화천군수, 박대현 도의원, 이화원 화천군노인회장, 정병록 화천읍노인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강원도민일보

2023 10 31 ()

13

정선 전역 40분 내 농기계 임대 시스템 구축

농업기계 임대 화암분소 준공
탈곡기·굴삭기 등 58대 구비
농업인 서비스 강화·경비 절감



정선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화암분소 준공식이 30일 화암면 화암리 현지에서 최승준 군수, 김기철 도의원, 전영기 군의장, 지역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군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정선군 화암면 지역 농업인들을 위한 영농 서비스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정선군은 30일 화암면 화암리 401-1번지에서 최승준 군수, 김기철 도의원, 전영기 군의장, 지역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군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화암분소 준공식을 가졌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농업인 서비스 강화와

고가의 농업기계를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해 농업인 경비 절감은 물론 농기계 이용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화암분소는 30억원을 들여 4427㎡의 부지에 연면적 1028㎡ 규모의 지상 2층 건물로, 보관창고와 농선별장, 간이격납고, 관리사무실, 실습장

등을 갖추고 있다. 이곳에는 지게차, 운반 배송차량 등 관리장비 10종 10대와, 굴삭기, 농업용트랙터, 탈곡기 등 22종 58대의 임대농기계를 구비하고 있다.

최승준 군수는 "화암분소가 준공을 마치고 9개 읍면 농업인들이 40분 내로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됐다"며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 농번기 공동급식, 농자재 반값 정책 등 맞춤형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선지역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는 정선분소, 신동분소, 임계분소, 화암분소 4곳으로 확대됐다.

유주현 joohyun@kado.net

江原日報

정선군 전역 40분대 농기계 콕서비스

임대사업소 화암분소 준공 ... 22종 58대 비치

【정선】농업기계 임대사업소 화암분소가 준공되면서 정선군 전체 지역에 40분대 농기계 콕서비스가 가능해졌다.

군은 30일 화암면 화암리 일원에서 최승준 정선군수, 전영기 정선군의회장, 김기철 도의원 등 기관단체장과 농업인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화암분소 준공식을 개최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화암분소는 30억원이 투자돼 4,427㎡의 부지에 연면적 1,028㎡ 규모의 지상 2층 건물로 보관창

고와 콩선별장, 간이격납고, 관리사무실, 실습장 등을 갖추고 있다.

군은 관리장비를 포함해 1톤 굴삭기 등 22종 58대의 농기계를 구입, 이달부터 본격적인 임대사업에 돌입했다.

군은 고가의 농업기계를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해 농업인들의 농기계 구입비를 경감하는 것은 물론 농기계 이용 활성화를 통해 부족한 농촌 일손을 대체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군이 운영하는 농업기

계 임대사업소가 정선본소를 비롯해 신동분소, 임계분소에 이어 화암분소까지 4개로 확대된 만큼 정선 지역 9개 읍·면 농기계 콕서비스가 40분 이내에 전 농가에 전달될 수 있는 배송 시스템이 구축됐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정선 농업인들의 오랜 숙원이던 화암분소가 준공을 마치고 9개 읍·면의 농업인들이 40분 내로 농기계를 빌릴 수 있게 됐다”며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 농번기 공동급식, 농자재 반값 정책 등 맞춤형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석기자 kim711125@

江原日報

10년 숙원 원주교육청 이전·신축 속도

세 번째 도전 끝에 교육부 중투심사서 조건부 통과
2026년 12월 목표 ... “단설유치원 설립 보강 준비 예정”

【원주】원주지역 교육계 최대 숙원인 ‘원주교육지원청 이전·신축’ 사업이 세 번째 도전 끝에 이뤄지게 됐다.

30일 교육당국과 박길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장에 따르면 원주교육청 이전·신축이 최근 열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통과 결정을 받았다. 추진에 나선 지 10여년 만이다.

1978년 명륜동에 건립된 원

주교육지원청은 공간이 협소하고 시설이 노후돼 직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교육당국은 청사를 옛 학생초교 부지로 이전해 신축기로 하고 지난해 4월 교육부 중투에 도전했지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차질로 심의조차 받지 못한 채 사전 반려됐고 올 7월 재도전한 중투도 통과하지 못했다.

이번 중투 심사결과 원주교

육청은 현 청사 부지 활용 계획 보강을 조건으로 이행 결정을 받았다.

교육부 중투위는 현 청사 부지에 신설되는 단설유치원과 관련해 수요조사를 재실시하고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의 내용 보완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내년 1월로 예정된 교육부 중투에서 보고 및 승인을 받아 2026년 12월 이전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390억원을 들여 옛 학생초 자리인 학생동 152-1 일대 부지 2만1,797㎡에 신축되는 원

주교육지원청은 건축면적 7,129㎡, 지하 1층-지상 3층 및 별동 1층 규모로 건립된다.

교육당국 관계자는 “통과 조건인 단설유치원 설립 보강 계획을 철저히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길선 도의회 교육위원장은 “원주교육청 이전이 완료되면 침체된 원도심을 활성화하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더 나은 원주 교육을 위한 교육 컨트롤타워가 되도록 제반 여건을 잘 갖추겠다”고 했다.

김설영기자 snow0@kwnews.co.kr

2023 10 31 ()

江原日報

원주교육지원청 도전 10여 년만에 이전.신축

원주 교육계 최대 숙원...교육부 중투 조건부 통과
2026년 12월 이전 목표



원주교육지원청 전경.

원주 원주지역 교육계 최대 숙원인 '원주교육지원청 이전.신축' 사업이 세 번째 도전 끝에 이뤄지게 됐다.

30일 교육당국과 박길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장에 따르면 원주교육청 이전.신축이 최근 열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통과 결정을 받았다. 추진에 나선 지 10여 년만이다.

1978년 명륜동에 건립된 원주교육지원청은 공간이 협소하고 시설이 노후돼 직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교육당국은 청사를 옛 학성초 부지로 이전해 신축키로 하고 지난해 4월 교육부 중투에 도전했지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차질로 심의조차 받지 못한 채 사전 반려됐고 지난 7월 재도전한 중투도 통과하지 못했다.

이번 중투 심사결과 원주교육청은 현 청사 부지 활용 계획 보강을 조건으로 이행 결정을 받았다. 교육부 중투위는 현 청사 부지에 신설되는 단설유치원과 관련해 수요조사를 재 실시하고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의 내용 보완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내년 1월로 예정된 교육부 중투에서 보고 및 승인을 받아 2026년 12월 이전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390억원을 들여 옛 학성초 자리인 학성동 152-1 일대 부지 2만1,797㎡에 신축되는 원주교육지원청은 건축면적 7,129㎡, 지하 1층.지상 3층 및 별동 1층 규모로 건립된다.

교육당국 관계자는 "통과 조건인 단설유치원 설립 보강 계획을 철저히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길선 도의회 교육위원장은 "원주교육청 이전이 완료되면 침체된 원도심을 활성화하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더 나은 원주 교육을 위한 교육컨트롤타워가 되도록 제반여건을 잘 갖추겠다"고 했다.

강원도민일보

2023 10 31 ()

03



국민의힘 강원특별자치도당 일편도심 총선거획단(왼쪽 사진)과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은 30일 속초와 춘천에서 각각 연석회의와 지역위원장·사무국장 연석회의를 열고, 내년 총선 승리 방안 등을 논의했다.

강원 총선 필승키워드 국힘 “정책” 민주 “소통”

여, 속초서 지역 공약발굴 마무리
야, 춘천서 도민 인터뷰 활용 제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지역 공약발표', '도민인터뷰활용' 등을 예고하며 총선 기초작업에 나섰다.

국민의힘 강원특별자치도당 일편도심 총선거획단(단장 김길수)은 30일 속초소재 이양수 국회의원사무실에서 연석회의를 갖고 내년 총선 필승 실천 방안을 공유했다.

김길수 단장은 “영동지역 민심 청취를 위한 자리”라며 “내년 총선 ‘압승’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이룰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광훈 속초·인제·고성·양양 당협 부위원장은 “최근 상황이 녹록지않아 당원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다보면 압승을 넘어 강원도 전승까지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강정호 강원도의원, 김명길 속초시의장, 기획위원 등 20여명이 참석해 지역 현안을 공유했다. 기획단은 이번 속초 회의를 끝으로 지역 공약발굴을 마무리하고, 다음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기획단은 지난 4월 출범해 영월(7월), 원주(8월) 등에 방문했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도 이날 춘천 도당사에서 지역위원장·사무국장 연석회의를 열고 '강원도민 10

만 인터뷰' 활용 등에 대한 방안을 공유했다. 도민 10만 인터뷰는 민주당 '도민소통 프로젝트'로, 지난 5월 출범식을 갖고 약 5개월간 진행해왔다.

김우영 강원도당위원장은 “지난 8월 말부터 민주당 전 당원들이 검찰의 무도한 정치보복에 맞서 치열하게 싸웠다”며 “다음 정권을 되찾기 위한 교두보로써의 내년 총선에서 역량을 총동원하자”고 밝혔다.

허영 춘천·철원·화천·양구갑 국회의원은 “도민 10만 인터뷰를 내년 4월까지 지속적으로 진행해서 강원도에서 능력있고 대안있는 정당이 되자”고 말했다. 이밖에도 원창목·한호연·박상진·허필홍 지역위원장과 각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최정목 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장은 10만 인터뷰 활용 등을 제시했다. 박주석·이철화

2023 10 30 ()

江原日報

[포토뉴스]제8회 영귀미면 체육회장기 게이트볼대회 개최



'제8회 영귀미면체육회장기 게이트볼대회'가 27일 홍천 영귀미면생활체육공원에서 신영재 홍천군수, 박영록 홍천군의장, 홍성기 강원자치도의원, 김광수·황경화 군의원, 강문길 홍천축산농협 조합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2023 10 30 ()

江原日報

[포토뉴스]강원청년경제인연합회 제1회 골프대회 개최



(사)강원청년경제인연합회(회장:박재희)는 지난 29일 춘천 로드힐스골프앤리조트에서 '제1회 골프회장배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연합회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된 이번 골프대회에는 회원 40여명이 참석했다. 2부 행사에는 노용호 국회의원, 이무철 도의원 등이 참석해 청년 경제인들을 격려했다.

2023 10 30 ()

江原日報

[포토뉴스] 제30회 두촌면민 한마음대회 및 제27회 노인의 날 행사



제30회 두촌면민 한마음대회 및 제27회 노인의 날 행사'가 27일 홍천 두촌면생활체육공원에서 신영재 홍천군수, 박영록 홍천군의회장, 홍성기 강원자치도의원, 나기호 홍천군의원, 허필홍 더불어민주당 홍천형성영월평창지역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2023 10 30 ()

江原日報

[동정] 원제용.엄기호 강원자치도의원

원제용(원주) 도의원은 31일 오전 11시 원주 빌라드아모르 4층에서 열리는 원주시 6.25 참전유공자 위로연에 참석.

엄기호(철원) 도의원은 31일 낮 12시 철원 남종현 발명센터에서 열리는 국화 전시회에 참석.

2023 10 31 ()

江原日報

04

신경호표 학력 향상 정책 수능서 통할까

보름여 앞으로 다가온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에 강원 교육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신경호 교육감 취임 2년차 성과와 직결되는 데다 결과에 따라 향후 추진할 학력 향상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최근 도내 115개 고교에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강원 모의평가 문제지'를 배부했다. 도내 교사 104명이 참여한 강원학력평가연구지원단이 자체 제작한 수능형 평가 문제지로 도교육청 차원에서 이 같은 지

2024학년도 수능 16일 앞으로... 시험 결과 주목 신 교육감 취임 2년차 성과 직결·향후 정책 영향

원이 이뤄진 건 올해가 처음이다. 적지 않은 시간과 예산, 검토 작업이 필요한 수능형 평가 문항 개발에 공을 들인 만큼 학생들의 학력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다.

도교육청은 올해 '배움·성장! 스스로 공부하는 학교문화 만들기' 사업도 실시했다. 2023학년도 강원자치도 내 재학생 대입 결과에 따른 후속 정책으로 학력 신장 및 수능 핵심역

량 강화 등이 목적이다. 도내 고교 대부분이 이 사업에 참여했으며 일부 학교는 여름방학 동안 기숙형 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가 형성됐다. 신경호 교육감도 최근까지 직접 현장을 누비며 수험생과 교사들을 격려했다.

교육계는 올해 수능 성적에 주목하고 있다. 대상이 고3 수험생으로 한정돼 있고, 관련 정책이 단기간에 큰

성과를 내기는 어렵지만 학력 향상의 방향성을 확인하는 지표가 될 수 있어서다. 도내 교육계 관계자는 "교육 정책이 효과를 보려면 최소 4~5년은 걸린다"면서도 "다만 신 교육감 취임 이후 학교 현장의 분위기가 다소 달라졌고,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학력 향상 정책에 역량을 집중했기 때문에 수능 결과에 일정 부분 의미를 부여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11월16일 실시되는 2024학년도 수능 도내 응시자는 지난해보다 151명 감소한 1만2,179명이다.

원선영기자 haru@

강원도민일보

2023 10 31 ()

02

내년부터 이·통장 수당 '월 30만원 → 40만원' 처우개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개정 인상 지원시책 등 세부사항 자율 운영 현장활동 적극성·책임감 강화

내년부터 이·통장 기본수당 기준액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오른다. 행정안전부는 안전관리와 복지행정 분야에

서 이장과 통장의 역할이 증가함에 따라

라 처우가 개선된다고 30일 밝혔다. 읍·면·동에서 행정 보조자로 활동하는 이장과 통장은 주민등록 사실 조사 등 법령 및 조례상 업무 수행은 물론 정부와 자치단체의 행정 시책을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동시에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일도 맡는다.

이장과 통장은 구체적으로 안전관리 분야에서 △계절적 재난 대비 예찰 △지역행사 점검 △관내 사건·사고 보고

△재해시설 점검 및 복구 협조 등을, 복지행정 분야에서 △저소득 긴급 복지 및 위기가정 발굴 △복지수요 현장 방문 △후원물품 배부 △복지시책 홍보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장과 통장의 현장 활동 적극성을 확보하고 책임감을 강화하기 위해 기본수당 기준액을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린다. 기본수당은 이장과 통장 업무 수행에 필

요한 활동 보상으로 자치단체 예산 범위에서 월정액으로 지급된다.

행정안전부는 수당 인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개정해 11월 중 자치단체에 통보한 뒤 2024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동시에 이장과 통장이 자긍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통장 운영의 법적 근거를 지방자치법에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통장의 임명·

운영·지원시책 등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조례나 규칙으로 정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행안부 성현모 자치분권지원과장은 "이번 처우개선을 통해 이장과 통장이 주민과의 접점에서 더욱 활발하게 활동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장과 통장의 처우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도 감사드린다"고 했다. 남궁창성

강원도민일보

동해·속초·삼척·홍천 부단체장 3급 상향 공직사회 ‘촉각’⁰³

인구 5만~10만명 기초지자체 대상
도 4개 시·군 내년 6월 인사 전망
“분위기 쇄신·승진 적체 해소 기대”

속보=내년부터 인구 5만~10만명 이하 기초지자체 부단체장 직급이 현행 4급(서기관)에서 3급(부이사관)으로 상향(본지 10월 30일자 1·3면) 조정되는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내에선 동해시와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등 4개 시·군이 해당, 강원 공직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방정부자치조직권 확대를 골자로 한 자치조직권 확대안에 대한 법령 개정과 국무회의 의결, 입법예고(45일간), 시군 조례 개정 작업 등을 단계적으로 거쳐야해 부단체장 직급 상향을 적용한 인사는 내년도 6월 인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3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윤석열 대통령 주제로 최근 경북 안동에서 개최된 제5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선 자

치조직권확충방안 등이 의결됐다.

부단체장 직급 상향과 관련, 인구 5만~10만명 지역은 내년부터, 5만명미만은 2025년 이후부터 직급이 상향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도내에선 우선적으로 내년부터 △동해시(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올해 6월 기준 인구 9만 9058명) △속초시(“ 8만 2474명) △삼척시(“ 6만 3270명) △홍천군(“ 6만 7632명) 등 4개 시·군 부단체장 직급이 3급으로 상향 조정될 수 있게 됐다. 4개 시·군 부단체장 직급 이상 상향 조정되면 도내 18개 시·군 부단체장 3급 자리는 도내 빅3도시인 춘천시와 원주시, 강릉시를 포함해 총 7개 시·군이 된다. 이와 관련, 도내 공직사회에서는 “이번 조치가 적용되면, 공직사회 분위기 쇄신과 함께 공무원 승진 인사적체 해소도 기대,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기초지자체 부단체장 직급 상향은 2024년 인사안 적용을 거쳐 2025년에는 인구 5만명 미만 시·군·구에도 전면 적용된다. 박지은 pje@kado.net

江原日報

농촌에 ‘빈집’ 4천채 육박... 5년새 48% 급증⁰⁵

정비사업 연간 394동 지지부진
대부분 철거 위주 활용은 전무

저출산 고령화의 여파로 강원특별자치도 농촌에 ‘빈집’이 급증하고 있다. 정부와 광역지자체의 지원 없이 기초지자체가 정비 사업 예산을 전액 부담하

면서 철거도 활용도 지지부진하다.

30일 농림축산식품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강원자치도 농촌지역의 빈집은 지난해 3,886동으로 5년 전 2,624동 대비 48% 증가했다. 강원지역의 빈집은 전국 17개 시·도 중 6번째로 많다.

실제로 춘천 동면 지내1리의 경우 2년 전만 해도 빈집이 2동이었지만 현재 5동으로 늘어났다. 이 마을 280여가구 세대주의 절반 이상은 80대 이상이고, 독거노인이 많아 앞으로 빈집은 더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천 등 군 단위 지역에는 20년 이상 방치된 빈집도 부지기수다.

마을 관계자들은 “동네에 빈집이 1동만 있어도 마을 분위기는 침체될 수밖에 없다”며 “무너지기 직전인 위험한 빈집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농촌 빈집 정비 사업은 지지부진하다.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빈집 정비사업은 2019년 349동, 2020년 429동, 2021년 361동, 2022년 412동, 2023년 419동 등으로 연 평균 394동에 그쳤다. 각 시·군은 1동을 철거할 때마다 300만~700만원씩 지원 중이다. 소유주 동의 절차, 철거 예산 확보가 어려워 정비사업도 한계를 겪고 있다.

강원도의 빈집 정비사업이 ‘철거’ 위주이고 ‘활용’은 전무한 것도 문제다. 최근 5년간 빈집을 농촌 체험장 등으로 활용한 사례는 단 2건(정선·영월 각 1건)에 불과하다. 강릉원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농촌의 생활 인구 확대를 위해서는 철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활용 방안”이라며 “한달살기 등 프로그램 개발에 지자체들이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하림기자 peace@

2년 뒤 강원산 양식 연어 식탁에 오른다



◇강릉·양양 일대가 대서양연어 양식단지로 거듭난다. 사진은 대서양연어 양식 모습(왼쪽)과 연어 양식 산업단지 클러스터 조감도.

道 아시아 최대·최고의 연어 산업화 실현 기대

강원형 테스트베드 내달 착공 ... 미래 먹거리산업 추진 박차 클러스터 배후 부지에 대규모 스마트 양식장·관련 기업 입주 2025년 본격 운영 2만톤 생산 시 경제적 파급효과 7,980억원

세계 60조원의 부가가치 효과가 있는 '연어'가 강원특별자치도의 신성장산업 어종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서·남해안이 양식산업의 경쟁력 측면에서 우위를 점해 왔다. 수심이 낮고 파도를 막아주는 섬과 내만이 많아 적은 시설 투자로 생산성을 높여 가격 경쟁 등에서 강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연안 수온 상승, 서·남해안의 어장 노후 및 질병 발생, 세계적 양식기술 현대화 및 대형화 등이 국내 양식산업을 위기로 몰아 넣고 있다. 이 같은 위기 속에 한류성 어종인 연어양식이 세계적으로 급부상하면서 국내에서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도-양식어가-대기업 트리아앵글 산업화 벨트

강원특별자치도는 대서양연어를 주력 품종으로 내세워 2021년부터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한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4차)' 공모에 선정됐다. 연어 양식기술개발, 기자재 실증, 데이

터 수집, 인력 양성 등 연어 스마트양식의 종합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강원형 테스트베드가 11월 착공된다. 2024년까지 총 300억원을 투자해 강릉시 연곡면의 수산자원연구원 내에 설치된다. 내년 말까지 준공 및 시험가동 후 2025년에 본격 운영된다.

테스트베드에서는 양식 기술과 수질관리, 우량종자를 양식 어가에 제공하고, 양식 어가는 종자, 치어 양식을 통해 생산된 데이터를 테스트베드에 전송하며 기업에 연어 스마트(바다로 갈 준비가 된 연어)를 납품한다. 기업은 스마트로 연어 상업생산의 빠른 회전력을 보유하게 돼 이윤을 창출하며, 기업에서 생산된 데이터는 테스트베드와 공유된다. 이러한 시스템을 바탕으로 150여개의 송어양식 어가와 연계해 도+양식 어가+대기업 간 트리아앵글 산업화 벨트 조성으로 지역상생 발전 모델이 만들어진다. 양양군 손양면에 연어클러스터 배후부지도 조성된다. 배후부지 1에는 ㈜동원산업이 3,000억



◇11월 착공 예정인 연어 스마트양식 테스트베드 조감도.

원을 투자해 연간 생산량 2만톤을 목표로 한 대규모 연어 스마트 양식장이 조성되고, 배후부지 2에는 연어 양식, 가공·유통, 신소재, 기자재, 장비·장치 등 연관 기업들이 입주한다.

■연어 2만톤 생산, 경제적 파급효과 7,980억원

강원특별자치도는 대서양연어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지자체다. 2019년 대서양연어 양식의 해수양식 특허를 취득하고 완전양식에 성공

했다. 디지털 정보 기반 수온내성 육종 품종 개발을 비롯해 스마트 담수양식 모델개발, ICT기반 친환경 순환여과 양식 기술개발, 연어 배합사료 사육평가 등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국립수산물과학원에서는 강릉 주문진 일대에 국내 최초 질병예방연구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이러한 연어 양식분야에 대한 연구 외에 도는 연어 전후방 산업화에도 주목하고 있다. 연어 2만톤 생산 시 경제적 파급효과는 7,980억원, 고용유발 효과는 1,5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연어 산업화는 우리나라 수산업을 이끄는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는 지역경제의 도약을 이끄는 신성장 연어 특구 조성, 지역 산업과 결합을 통한 미래 먹거리 산업단지 조성 등 아시아 최대·최고의 연어산업화를 실현하기 위해 연어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나섰다. 최우홍 강원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장은 "일본, 중국, 아세안 시장 등에서 연어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향후 강원특별자치도가 연어 수출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최영재기자 yf5000@

공동기획: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 해양수산국·강원일보

2023 10 31 ()

강원도민일보

04

고성 이어 철원서도 발생...도내 5번째 렘피스킨병 확진

29일 의심증상 신고 30일 판정 방역팀 투입 확산 방지 총력전 고성·양구 등 접경지 피해 집중 바이러스 DMZ유입 가능성 제기

지난 29일 고성군에서 렘피스킨병이 발생한지 하루만인 30일 철원군에서도 렘피스킨병이 발생했다.

강원특별자치도내에서 누적 다섯 번째 발생 사례다.

강원특별자치도 방역당국은 30일 철원군 갈말읍 소재 한우농가에서 렘피스킨병이 최종 확진됐다고 밝혔다. 한우 13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해당 농가는 지난 29일 오후 2시쯤 농장주가

예찰을 하던 과정에서 사육 소가 식욕 부진, 피부결절 등 의심 증상이 발견돼 신고를 진행했다. 이후 관할 동물위생시험사업소가 축방역관을 현장에 파견 해 시료를 채취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를 진행한 결과 30일 오전 11시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도내 렘피스킨병 확진 건수는 양구 2건, 횡성 1건, 고성 1건, 철원 1건까지 총 5건으로 늘었다.

렘피스킨병 확산 차단을 위해 도 동물방역과 통제관, 동물위생시험소 소속 축방역관과 가족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을 긴급 투입해 현장 통제 및 소독과 역학조사, 긴급 살처분 조치를 하고 있다.

한편 바이러스성 전염병인 렘피스킨병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강원 고성

과 양구 등 접경지역에서 피해가 집중되는 가운데 이 곳의 감염경로로 비무장지대(DMZ)를 통한 바이러스가 유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30일 렘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전날 강원 고성과 양구 등에서 확인된 확진 사례의 경우 DMZ를 통해 바이러스가 넘어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30일 브리핑을 통해 "렘피스킨병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 등 곤충이 선박을 통해 서해안으로 들어왔으며 강원도 등 북한 접경지역은 비무장지대를 통해 위험요인이 왔을 것"이라며 "확인할 수는 없지만 북한에서 왔을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재용·김정호

2023 10 31 ()

강원도민일보

08

춘천시의회 '댐 주민피해 공론화' 협의체 동참

충주시의회 협의체 구성 합의 댐소재지시군구의회협 가입 공공기관 춘천 이전 촉구도

속보=춘천시의회와 충주시의회가 댐관련 주민피해 공론화협의체 구성에 합의(본지 10월 11일자 4면)한 가운데 춘천시의회가 30일 충주시의회가 추진 중인 '전국댐소재지시군구의회협의체'에 가입하기로 했다.

30일 본지 취재 결과 춘천시의회는 이날 소회의실에서 전체의원 간담회를 열고 전국댐소재지시군구의회협의체 구성에 대해 논의한 결과 찬성으로 결정했다. 충주시의회는 최근 전국댐소재지 24곳에 전국댐소재지시

군구협의체 발족에 대해 공문을 보냈다. 협의체 발족은 내달 넷째주로 예정됐다. 김진호 시의장은 "춘천지역 뿐만 아니라 댐이 있는 시·군·구의회와 공동협의체를 만들어 지역주민의 건강과 이익, 행복을 대변할 수 있도록 의견수렴했다.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중지가 모아졌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본지와 춘천시의회, 충주시의회가 마련한 소양강댐·충주댐 주민피해 공론화를 위한 공동세미나를 통해 두 의회는 댐주변지역의 피해를 함께 고민하고 주민들이 댐과 상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방안도 도출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회의의를 개최하는 데에 합의했다.

이밖에도 춘천시의회는 제329회 2차 본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이전 춘

천시 유치 결의문을 발표했다. 결의문을 대표발의한 김보건 기획행정위원장은 "춘천시는 강원특별자치도법특례가 반영돼 연구개발특구,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가 조성될 예정인데 다수열에너지융복합클러스터, 바이오산업이 활성화하고 있어 공공기관 이전지로 손색이 없다"며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이 기존 혁신도시 중심으로 이뤄지는 점에 커다란 우려를 표한다. 혁신도시가 아닌 권역별 거점에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것이야말로 지방시대가 성공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이희자 시의회 복지환경위원장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거두 7, 8리에는 노인들이 많이 거주하지만 경로당이 없고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이 없다"며 "마을회관, 경로당, 문화시설이 결핍된 복합건물을 조속히 건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희영 시의원은 "국비 삭감과 상담소 운영법인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춘천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가 9월부터 시설 운영이 중단돼 새 운영법인이 상담을 재개하고 있지만 한정된 시비로 성폭력상담소는 운영 재개가 불투명하다"며 "춘천시가 강력한 정책적 의지를 갖고 책임 있는 위탁운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환규 시의원은 "축제나 문화행사가 자체 지원예산에 의존해 보여주기식 축제로 하향평준화되고 있다"며 "주제와 특성이 반영된 핵심 콘텐츠를 개발하고 축제평가지표를 구축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승은

江原日報

2023 10 31 ()

“홍천~용문 철도, 수도권 접근 다변화·균형발전 기여”

01

‘홍천 철도포럼’ 국회서 열려... 철도망 구축 방안 제시

강원자치도의 단일 지역화 및 강원과 수도권의 효율적 연결을 위해 홍천 광역철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유상범 국회의원, 홍천군, 강원일보사 등이 주최·주관하고 홍천군의회, 홍천철도법군민추진위원회, 강원연구원 등이 후원하는 ‘2023 홍천 철도포럼’이 30일 국회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재훈 한국교통학회 박사는 이번 포럼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철도망 구축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며 철도의 미래가치, 강원자치도 사회경제구조 특성 등을 설명하고 철도망 구축 방향을 제시했다. 이 박사는 “강원자치도가 하나의 생활·경제권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메가시티 급철도 건설이 필요하다”며 “용문~홍천 철도와 GTX-B노선 춘천 연

장, 고속철도 구축 등을 통해 강원도의 전국화 및 수도권과의 일체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장진영 강원연구원 박사는 ‘용문~홍천 광역철도의 필요성’ 주제발표를 통해 균형발전과 지역 특화도시 구축을 위해 비수도권 광역철도 선도시업인 홍천 철도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장 박사는 “용문~홍천 철도가 현실화되면 영서지역 수도권 접근 다변화로 교통망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고령화 사회문제 해소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제발표 후에는 권혁순 강원일보 논설주간이 좌장을 맡고 김재진 강원연구원 박사, 나기호 홍천군의원, 이규설 홍천철도법군민추진위원장, 이호 한국교통연구원 철도본부장, 조정순 홍천군 미래성장추진단장 등이 참여하는 토론이 이어졌다.
서울=하위윤기자 hwyy@kwnews.co.kr

2면에 계속

江原日報

2023 10 31 ()

강원자치도 ‘동해안 철도시대’ 비전 선포

02

동해선 개통 앞두고 경북·울산·부산과 협약 추진

고성~강릉~동해~삼척~포항~울산~부산 동해선 철도 개통을 앞두고 강원·경북·울산·부산이 공동으로 동해안 철도시대 비전을 선포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경북, 울산, 부산 등 동해안을 접하고 있는 시·도를 연결하는 동해선 철도 개통을 앞두고 ‘동해안 철도시대 개막 선포 업무협약’을 추진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1999년 확정된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따라 동해선 미개통, 폐선구간을 연결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현재 단선 구간인 삼척~포항 간 철도건설사업과 비전철 구간인 동해~포항 간 전철화 사업이 진행 중이다. 현재 동해선 삼척~포항

고속철도의 공정률은 95%를 넘어섰으며 동해~포항 전철화 사업의 공정률은 40%대로 내년 하반기 개통 예정이다.

동해선 개통 시 동해·삼척~부산까지 2시간10분, 강릉~부산 간은 3시간 5분으로 단축된다. 현재 강릉에서 부산까지 차량으로 5시간가량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이동시간이 2시간가량 단축된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동해선 철도는 한반도의 척추이자 백두대간의 등줄기에 해당하는 노선으로 동해안권 관광과 물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최기영기자 answer07@kwnews.co.kr

강원도민일보

부단체장 직급 상향·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인상 추진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

기회발전특구 설계·운영 자율화
자치입법권 국가 관여 '최소화'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 구축도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지난 27일 경북도청에서 개최됐다. 회의 시작에 앞서 윤 대통령이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제공=강원특별자치도청

자치분권이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를 맞아 크게 진전될 전망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대표들은 지난 27일 안동 경북도청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갖고 △자치조직권 확충 △기회발전특구 조성 △자치입법권 강화 △교육재정 합리화 △지방주도 통합 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자치조직권은 국장급(시·도 3급, 시·군·구 4급) 기구설치 자율화 및 국장급한시 기구설치시행안부와 시·도 협의권 폐지, 인구 10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 단계적 상향, 시·도 소방본부장 직급 단계적 상향,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인상 등에 의견을 모

았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기업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특례 △세제·재정 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이다.

비(非)수도권 및 수도권내 인구감소지역이나 접경지의 신규 입지·기

입지(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등)가 대상이다.

광역시는 150만평(4.96km²), 도는 200만평(6.6km²) 규모다. 정부는 지역주도형 균형발전이 맞게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특구를 설계·운영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자치입법권은 지방 사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대폭 위임하고 국가 관여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중앙과 지방을 협업을 통해 법률 82개, 하위법령 65개를 일괄 정비할 계획이다. 교육재정은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RISE) 시범지역인 부산, 대구, 충북,

전남·북, 경남·북 7개 시·도를 중심으로, 지역주도 대학 지원체계로의 전환을 통해 성과를 공유한 뒤 오는 2025년 전체 시·도로 확대할 방침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동시에 지방의 일, 삶 및 여가·문화 등을 끌고루 발전시키기 위한 통합 발전계획을 수립해 타당성을 심의·평가한 뒤 재원을 확보하고, 개선된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를 활용한 관리체계를 구축 운영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우리가 지역균형을 언급하는데 균형발전이 왜 중요하나? 그것은 편중된 상태로는 발전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면서 "우리 GDP(국내총생산)를 높이고 확실하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도를 빠짐없이 촘촘하게 다 써야 된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중앙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교육부·이상민 행정안전부·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지방정부에서 이철우 시도지사협의회장(경북지사),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진태 강원지사 등 16개 시·도지사가 참석했다. 남궁창성

강원도민일보

자치조직권 확대, 분권 강화 계기

-시·군 부단체장 직급 상향 등 권한 확대 전망

지방 행정의 자치조직권 확대와 기회발전 특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강원특별자치도의 권한 확대가 전망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자율과 책임이 조화되는 자치조직권 확충방안'을 의결했습니다. 방안에는 지방자치가 한 단계 더 진전할 중요한 내용이 포함돼, 지역공식사회와 주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특별자치도법과 상승효과를 내 고도의 자치권을 가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들 계획이 제도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지역발전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하도록 자치단체 차원에서 사전 준비를 치밀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자치조직권 확충 방안은 주목할 만합니다. 현재는 인구수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의 국장급 기구 수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의결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의 국장급 기구를 설치할 때 자율성을 부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한시 기구 설치에 자율성을 확대하고, 인구 10만명 미만의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 상향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특히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인상과 시도 소방본부장 직급 상향, 정보공개 확대도 포함돼 지역 행

정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됩니다.

이날 회의에선 자치조직권 확충과 함께 기회발전특구 추진 계획도 구체화해 지역의 기대를 모읍니다. 특구는 비수도권 및 수도권 내 인구감소 지역이나 접경지 신규입지·기존입지가 대상입니다. 광역시는 150만평, 도는 200만평 규모입니다. 정부는 지역주도형 균형발전이 맞게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특구를 설계·운영하도록 한다는 구상입니다. 자치입법권은 지방 사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대폭 위임하고 국가 관여를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 밝혀진 구상은 지방자치 권한 강화의 분수령이 될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동시에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통합발전계획을 수립해 재원을 확보하기로 한 점은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개선된 지역발전 투자협약제도를 활용한 관리체계를 운영하기로 해, 향후 추이에 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한꺼번에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치권 강화를 위해 정책적 속도를 내야 할 때는 추진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지금이 그럴 때입니다. 향후 더욱 전향적인 제도적 장치와 자치권 확대 노력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강원도민일보

2023 10 31 ()

/ 19

자치조직권 확대, 분권 강화 계기

-시·군 부단체장 직급 상향 등 권한 확대 전망

지방 행정의 자치조직권 확대와 기회 발전 특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강원특별자치도의 권한 확대가 전망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회 중앙지방협력 회의에서 '자율과 책임이 조화되는 자치조직권 확충방안'을 의결했습니다. 방안에는 지방자치가 한 단계 더 진전할 중요한 내용이 포함돼, 지역 공식 사회와 주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특별자치도법과 상승효과를 내 고도의 자치권을 가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들에게 획기제도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지역 발전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하도록 자치단체 차원에서 사전 준비를 치밀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자치조직권 확충 방안은 주목할 만합니다. 현재는 인구수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의 국장급 기구 수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의결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의 국장급 기구를 설치할 때 자율성을 부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한시 기구 설치에 자율성을 확대하고, 인구 10만명 미만의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 상향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특히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 활동비 인상과 시도 소방본부장 직급 상향, 정보공개 확대도 포함돼 지역 행

정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됩니다.

이날 회의에선 자치조직권 확충과 함께 기회발전특구 추진 계획도 구체화해 지역의 기대를 모읍니다. 특구는 비수도권 및 수도권 내 인구감소 지역이나 접경지 신규입지·기존입지가 대상입니다. 광역시는 150만평, 도는 200만평 규모입니다. 정부는 지역주도형 균형발전에 맞게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특구를 설계·운영하도록 한다는 구상입니다. 자치입법권은 지방 사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대폭 위임하고 국가 관여를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 밝혀진 구상은 지방자치 권한 강화의 분수령이 될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동시에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통합발전 계획을 수립해 재원을 확보하기로 한 점은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개선된 지역발전 투자협약제도를 활용한 관리체계를 운영하기로 해, 향후 추이에 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지방 자치가 한꺼번에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치권 강화를 위해 정책적 속도를 내야 할 때는 추진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지금이 그럴 때입니다. 향후 더욱 전향적인 제도적 장치와 자치권 확대 노력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강원도민일보

2023 10 31 ()

/ 19

'구미정 원림' 국가명승 가능성 있어

-정선군 정암사탑 국보 이어 적멸보궁 승격작업도 주목

정선군임계면의 구미정과 이일대 골지천 경관은 국가문화재 명승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학계 보고가 나왔습니다. 정선군에서 구미정과 골지천 활용을 위해 문화재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10월 26일 개최된 심포지엄에서 제기됐습니다. '정선 구미정원림 일원' 등으로 명칭을 정리하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나와 향후 추진에 관심이 쏠립니다.

한국전통조경학회장을 역임한 노재현 우석대 교수는 '정선 구미정원림의 풍치미와 명승적 면모' 주제의 연구 결과 구미정 일원은 전통조경학적 측면에서 누정원림, 별서원림, 구곡원림 성격을 두루 갖추고 있는 경관 요처라고 밝혔습니다. 구미정은 1692년부터 시작되는 500여년의 역사성이 있고, 둘러싼 경관은 '9미 18경'으로 명명돼 향유돼 왔기에 조경학적으로 복합적인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구미정은 1946년 대대적으로 보수를 거쳤기에 단독 지정보다는 경관을 아우르는 '구미정원림 일원'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국가지정에 앞서 우선도 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두 가지 큰 과제도 등장했습니다. 첫째 구미정 건물변천사 및 건립자인 수고당 이자를 비롯한 여러 역사인물과 관련된 시문학자

료 정리 분석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둘째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 성과를 높이기 위해 주민과 마을에서 어떻게 역할을 분담할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주민 중에는 보존으로 인해 경제적인 손해를 우려하는 측면이 있기에 다각적인 활용안과 일자리 창출이 병행돼야 합니다.

정선군은 꾸준하게 문화유산의 가치를 높여가는 대표적인 지역으로 꼽히기에 구미정원림 일원에 대해 성과를 기대하게 됩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은 강원지역에 3개 시군이 자랑하고 있는데 그중 정선은 아리랑이 포함돼 있습니다. 국보를 보유한 시군은 도내 8곳에 불과합니다. 정선군에서 꾸준하게 노력해온 결과 정암사수마노탑이 보물에서 국보로 승격돼 보유지역에 들게 됐습니다.

더욱이 후속으로 착수한 정암사 적멸보궁 수리과정에서 1700년대 상량문이 새로 발견됐을 뿐만 아니라 수준 높은 천장 민화단청이 드러나 내년도 문화재 승격을 염두에 둔 학술작업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정암사 측에서는 천정을 가렸던 연등을 옮겨 민화장식을 감상하도록 하는 등 적극 협력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 회복의 하나로 문화분야 확충에 방점을 찍은 정선군 정책은 눈여겨볼 만합니다.

江原日報

2023 10 31 ()

/ 19

최선의 지역소멸 위기 대응책은 '미래산업 육성'

김진태 지사가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5회 중앙지방 협력회의에서 지역의 핵심 미래산업인 반도체, 바이오 헬스 육성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중부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원주가 편입되기를 바란다는 점을 강조했다. 입지적으로 용인과 30분대 교통망이 구축돼 있는 점, 삼성전자와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해 반도체산업 발전 협력 협약식을 가진 점 등 그간의 강원반도체산업 육성 성과를 덧붙여 역설했다. 올 하반기 공모가 예정돼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관련해서 강원특별자치도에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건의했다. 바이오헬스의 경우에는 춘천 제외인 단, 원주 정밀의료, 홍천

국가항체, 강릉 천연물, 평창 그린바이오로 이미 바이오헬스 5대 벨트가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피력했다.

앞서 김 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다음 날인 올 6월12일 '미래강원 2032'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당시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로 도약을 위해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 에너지, 접경지역 산업을 중점으로 한 제조업 등 5대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목표로 삼았다. 이는 곧 강원자치도의 비전인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와 민선 8기 3대 도정 목표(인구 200만명, 지역내총생산 100조원, 시통팔달 수도권 강원시대) 실현을 위한 청사진이었다. 미래산업을 잘 키우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지역경제가 좋아지면 사람이 모여 지역소멸

대응의 핵심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구상과 맞닿아 있다.

지방은 인구감소가 지속되면서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 올 2월 기준으로 소멸위험지역이 전국 228곳 시·군·구 가운데 118곳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이 모든 게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강원자치도가 대응 방향을 미래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 성장에 초점을 맞춘 것은 올바른 설정이다. 지역경제가 악화될수록 실업률은 높아지고 경제는 더 깊은 수렁에 빠진다. 경기 활성화가

인구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이미 검증됐다. 지금 지방이 처한 사라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경제 성장이 최선의 방법이다.

강원자치도의 산업

성장 잠재력은 크다. 수도권과 인접해 있는 데다가 서울 청량리에서 춘천과 원주까지 각각 기차로 딱 1시간 걸린다. 강릉도 1시간30분 거리다. 여기에 동서고속철도가 완성되고 GTX-B 춘천 연장, 용문~홍천 철도, 제천~영월~삼척 동서고속도로도 차근차근 추진되고 있다. 시통팔달 강원특별자치도가 포화 상태에 있는 서울과 수도권을 대체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특별한 지역이 될 수 있다. 중부권 반도체 클러스터가 구축되고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선정된다면 강원은 물론 대한민국의 경제지도가 획기적으로 확장되고 지역소멸 위기 극복의 선도 모델이 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김 지사의 건의에 귀 기울여 주기를 기대하는 이유다.

김 지사, 강원반도체 윤 대통령 관심 촉구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등도 건의
지방 선도 모델 '강원자치도' 될 수 있기를

江原日報

2023 10 31 ()

/ 19

시·군 ‘연대-협력’ 강화해야 지역 현안 해결된다

강릉·동해·속초·삼척·고성·양양 등 동해안 6개 시·군수로 구성된 동해안권 상생발전협의회가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해 공동 대처하기로 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동해안권 상생발전협의회는 지난 26일 속초시청 대회의실에서 제10차 정례회를 열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류수로 인한 어민 피해 최소화와 탄소중립사회 이행 및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상호협력 등 2건의 신규 상생협력 과제를 협의 안건으로 상정해 채택했다.

이날 시장·군수들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소비자들의 수산물 기피 현상으로 인한 어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농사용 전력 대상을 어업인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이를 한국전력에 공동 건의하기로 했다. 동해안 6개 시·군은 이를 계기로 지역 현안의 공동 해결을 비롯해 의제 발굴, 관광·문화·스포츠 축제 교류 등을 활발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 그간 관할구역 위주로 개별 사업을 해왔으나 이제는 행정의 광역적, 탄력적, 능동적 대응이 가능해졌다. 자치단체 간 비교 우위를 점목해 각종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 자치단체 간 협력 사업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게 사실이다. 지역 간 인적·물적 교류가 늘고 생활권이 광역화 추세를 보이

면서 더욱 그러해졌다. 개별 시·군의 내부적 역량의 한계, 특히 재원의 부족을 극복할 수 있고 중복 투자를 방지해 사업의 효율성도 가져오게 된다. 전에는 시·군 간 협력을 의도적으로 기피하거나 최후의 수단으로 여겼으나 이제는 상생을 위해 불가피해졌다. 동해안권 상생발전협의회 활동을 주목하는 이유다.

관건은 추진력이다. 취지가 제 아무리 가상해도 실현 의지가 미미하면 건성화되게 마련이다. 체류형 연계 관광상품 개발도 시급하다. 보존 가치가 큰 자연·문화관광 자원이 풍부하나 긴밀하게 잇는 협력 상품이 미흡하다. 그리고 동해안 6개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단계별 진척 상황을 수시로 공유해 원활한 상호 협조가 이뤄져야 한다. 자치단체들 간의 공조지만 주민들의 공감대도 중요하다.

지역사회가 동참해야 결집된 추진력이 발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동해안권 상생발전협의회 활동이 선언적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된다. 실질적 성과를 내야 한다. 동해안은 청정 이미지를 간직하고 있으나 남해안과 서해안에 비해 관광객의 접근을 위한 교통 시설은 빈약하다. 이러한 여건을 극복하고 상생 발전의 길을 찾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